

입법정책브리핑

Legislation & Policy Briefing

제2022-3호

발행일: 2022. 4. 26. (화)

제395회 국회(임시회, 2022. 4. 6. ~)

법무법인(유) 지평 공공정책팀은 (사)지평법정책연구소와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의 정책적 배경과 관련 법정정책 자료를 전달하는 입법정책브리핑을 발간합니다. 입법정책브리핑은 입법과 정책을 통합적 관점에서 고찰함으로써 법이 현실에서 살아 움직이고 정책이 헌법과 법치주의에 기반하여 구현되는 데에 기여하는 기초자료가 될 것입니다.

목 차

1. 개관

2. 주요 법정정책 이슈

- 가. 콘텐츠산업 진흥·육성
- 나. 중대선거구제도
- 다. 군장병 인권 보호

※ 별도의 인용표기가 없는 인용문과 그림 및 도표의 출처는 링크된 원문입니다.

법무법인(유) 지평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고객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지평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적 효력을 지닌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무법인(유) 지평의 변호사 및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십시오.

1. 개관

제395회 국회(임시회)는 2022년 4월 6일부터 시작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4월 15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 12건의 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제395회 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통과한 주요 법안으로는 (1) 2021년 발생한 공군 20전투비행단 성폭력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위한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2) 전국 11개 선거구에 한정하여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운영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3) 온라인동영상 서비스 등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을 반영하여 방송영상독립제작사 범위를 확대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4) 골프장업을 회원제·비회원제·대중형으로 새롭게 구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온라인 공연예술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있습니다.

제395회 국회(임시회)의 2022년 4월 15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12건의 법률안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공포 후 시행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건)	의안명	제안자
1	법제사법위원회(1)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7)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체육관광 위원장
3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체육관광 위원장
4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체육관광 위원장
5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체육관광 위원장
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 의원 등 12인
7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정주 의원 등 10인
8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소관 상임위원회(건)	의안명	제안자
9	정치개혁 특별위원회(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치개혁 특별위원장
1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치개혁 특별위원장
1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 의원 등 12인
12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성국 의원 등 12인

이번 호에서는 여러 중요한 법안 가운데 법정책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콘텐츠산업 진흥·육성, 중
대선거구제도, 군 장병 인권 보호 이슈를 다룹니다.

2. 주요 법정책 이슈

가. 콘텐츠산업 진흥·육성

개요

세계적 플랫폼의 성장과 함께 한국 콘텐츠의 해외 진출이 활성화되고 있으나, 국제 경쟁 또한 심화되
고 있습니다. 5세대 이동통신(5G)의 상용화에 따라 실감콘텐츠가 미래 성장동력으로 등장하는 등 콘
텐츠산업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미래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콘텐츠산업을 혁
신성장의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019년 9월 콘텐츠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했습니다.

2022년 4월 15일 본회의에서는 방송영상독립제작사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향후 미디
어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온
라인 공연예술의 지원 근거 마련으로 대면 예술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연예술계 지원과 새로운
기술에 따른 공연 관람 방식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통과되었습니다.

입법 동향

	소관 상임위원회	의안명과 주요 내용	의결일자 (본회의 결과)
1	문화체육관광 위원회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 의원 등 10인)	2022-04-15 (수정가결)

	소관 상임위원회	의안명과 주요 내용	의결일자 (본회의 결과)
1		<p>현행법에 따라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이하 “독립제작사”라 함)란 방송영상물을 제작하여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외국방송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음. 최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통한 영상물의 유통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러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독립제작사가 제작한 방송영상물을 제공받는 사업자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의 신고를 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방송영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자를 독립제작사가 제작한 방송영상물을 제공받는 사업자의 범위에 포함하여 변화하는 미디어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20호 등).</p>	2022-04-15 (수정가결)
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p>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p> <p>대규모 공연장 무대는 특수효과 장비와 조명기기를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화재 위험성이 높고, 다수의 인원이 밀집해 모여 있는 공간으로 화재 발생 시 중대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나,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화막에 대하여는 ‘공연장 무대시설의 안전진단 시행세칙’ (문화체육관광부고시)에 따라 ‘방화막’의 정의와 안전진단을 받도록 하고 있을 뿐 방화막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없음.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는 화재예방을 위하여 공연장 무대에 방화막을 공연장 무대에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려는 것임. 또한,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인해 현장성과 대면성, 일회성을 특징으로 하는 공연계는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기존 공연장 등 오프라인 중심의 공연이 아닌 온라인 상에서 공연을 시청 및 관람할 수 있는 ‘온라인 공연’과 ‘공연의 영상화’를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으므로, 온라인 공연예술활동을 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새로운 공연 관람 방식을 촉진하고 관객과의 소통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려는 것임.</p>	2022-04-15 (원안가결)

정책 동향

[100대 국정과제] 69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및 세계 속 한류 확산(문체부)

과제목표

문화콘텐츠산업 선순환 생태계 조성 지원을 통해 유망 콘텐츠기업 성장 및 일자리 창출

주요 내용

(공정한 제작·유통환경) 콘텐츠 주요 구성원 간 불공정 거래 개선을 위해 '17년부터 분야별 표준계약서 제정 및 보급 확대

* (영화) 제정 (애니메이션) 불공정 관행 개선 및 제정 (만화·웹툰·2차적 저작물) 계약서 보완 (대중문화) 대중문화예술인 대상 계약서 제정 (방송) 방송작가 집필표준계약서 제정

[100대 국정과제] 69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및 세계 속 한류 확산(문체부)

(융복합콘텐츠 육성·지원) 4차산업에 기반한 융합 플랫폼 구축 및 성장 단계별 지원과 첨단기술이 결합한 뉴콘텐츠 육성·확대*

* (콘텐츠 스테이션, '18년 청계천) 장르융합 콘텐츠 개발 및 기업 육성 (홍릉시연장, '17년 홍릉) 실험적 융복합 퍼포먼스 공연 (콘텐츠 멀티유즈랩, '17년 판교) 원천소스 IP 활용 협업 (VR콘텐츠 종합지원센터) VR 위주에서 타기술 기반 확대

(한류 확산 및 동반진출) 쌍방향 문화교류 및 착한 한류 실현으로 문화 콘텐츠 수출시장 및 연계산업 동반진출 확대

- '22년까지 현재 6천만명 한류팬을 1억 명으로 확대, '22년까지 세종 학당 지속 확대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 (2019. 9. 17. 발표)

콘텐츠의 힘으로 대한민국 혁신성장을 실현합니다

콘텐츠산업 혁신전략 3대 전략·10대 사업

1 정책금융 확충으로 혁신기업의 도약을 지원합니다

1 '콘텐츠 모험투자펀드' 신설로 투자 사각지대 해소

기획개발·제작초기 단계, 소외장르 등 혁신적 시도에 투자

2 안정적 운영자금 확보를 위한 '콘텐츠 기업보증' 확대

콘텐츠 기업 특화보증 확대 1개년
일반 기업보증 단계적 확대
콘텐츠 완성보증 공급 확대

콘텐츠산업 정책금융 1조+α 추가 확대(투자 4,500억원, 보증 7,400억원) ※ '19년 대비 신규 공급 누적액

2 선도형 실감콘텐츠 육성으로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합니다

3 공공서비스·산업·과학기술 분야 실감콘텐츠 혁신프로젝트(XR+α) 추진

공공서비스 분야

- AR 원격진단지원 시스템 구축
- 홀로그램, VR 등 대학교육 콘텐츠 제작
- VR 수술 시뮬레이션 개발 등

산업·과학기술 분야

- AR 매뉴얼 정비 제공
- 3D 공간정보 기반 이동체 가상훈련 시스템 개발
- AR 현미경 개발 등

4 문화관광 체험형 콘텐츠 및 체험공간 구축

주요 문화관광 거점을 실감 문화체험공간화
국립박물관 미술관 실감콘텐츠 체험관 조성
문화유산 실감콘텐츠 제작 및 활용

5 시장주도형 킬러콘텐츠 제작 지원

3대 분야 중점 5G 킬러콘텐츠 개발

- 실감 미디어(360도 멀티뷰 영상 등), 실감 커뮤니케이션(MR 원격회의 등), 실감라이프(VR 여행 등)

게임·음악·드라마 등 한류 선도 분야 실감기술 접목

- VR K-팝 공연, VR-AR 활용 웹툰 등

6 기업지원, 인재양성 등 산업 성장기반 강화

360° 입체 실감콘텐츠 제작 인프라 구축
초경량, 광각 등 AR 기기 핵심기술 개발

5G 실감콘텐츠 법·운영, 문화기술 대학원 지원
해외 실감콘텐츠 거점공간 조성

문화체육관광부

JIPYONG

지평법정책연구소 · 지평 공공정책팀 4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 (2019. 9. 17. 발표)

3 신한류로 연관산업의 성장을 견인합니다

7 콘텐츠 유망기업 및 수출 핵심요소 집중 지원

- 콘텐츠 수출 허브 구축 및 수출지원 종합패키지 프로그램 신설
- 신용시장 현지 기업정보·제도 등 심층조사
- 콘텐츠 분야 번역 인력양성 지원
- SNS 등 활용 해외 온라인 마케팅 지원

8 소비자·관광 등 연관산업의 한류마케팅 지원 강화

- 해외에서 한국 생활문화·상품을 소개하는 '모꼬지 Korea' 신설
- 부처 협력 '문화·산업 융합박람회' 개최(연2회)
- 중소기업 우수제품 '브랜드K' 한류마케팅 강화
- 국내외 대표 한류행사 연계 확대 * KCON, 엔터산업 박람회(신설) 등
- 한류스타와 콘텐츠·소비재 협업상품 개발
- K-팝 전용 공연장, e스포츠 경기장 확충
- 한류축제 'K-컬처 페스티벌', 'K-팝 시즌' 운영

9 지식재산 보호 및 공정환경 등 한류 산업기반 강화

-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 집중 단속
- K-브랜드 보호 강화
- 콘텐츠 표준계약서 제·개정 등 종사자 보호
- 민관합동 범부처 '한류콘텐츠 교류 협력위원회' 구성

10 지속 가능한 한류를 위한 문화기반 확산

- 해외 초·중등학교 한국어 과목 채택 및 대학 한국어학과 개설
- 해외 세종학당 220개소 지정 운영 및 한국어교원 파견양성 확대
- 한국문화원 '한국문화 아카데미' 개설
- 해외 한류동호회 연합행사 K커뮤니티 페스티벌 개최
- 한-아세안 영화기구(가칭) 출범

출처 :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

참고 자료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2. 3.

유정주 의원안: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범위 확대, 온라인동영상제공자가 독립제작사의 제작 지원을 위해 노력할 의무 신설 등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 문화체육관광부 2019. 9. 17.

[2020년도 디지털콘텐츠산업 육성 추진계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2020. 1. 29.

[제작 초기 등 콘텐츠 모험 분야에 투자를 확대한다](#)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2020. 2. 13.

[2022 해외한류실태조사](#)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2022. 2. 25.

[2020년 기준 콘텐츠산업조사](#) 문화체육관광부 2022. 1.

[2019 콘텐츠 산업백서](#) 문화체육관광부 2020. 9.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에 대한 입법 및 정책적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쟁점」 2021. 12. 6.

국내 미디어콘텐츠산업의 발전차원에서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에 대한 제도 마련을 위해서는 정치 및 경제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치적 측면에서 글로벌 OTT를 통한 한류확산이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소프트파워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글로벌 OTT가 국내 콘텐츠산업과의 상생발전방안을 마련하도록 유도하는 전략 마련을 고려할 수 있다. 반면 경제적 측면에서는 글로벌 OTT의 국내 콘텐츠 이용에 따른 독점적 수익에 대한 정당한 보상제도 및 기금부과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해 볼 수 있다.

콘텐츠산업 환경변화에 따른 정책방향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보고서 2021. 12. 30.

○ 연구 배경

- 콘텐츠산업을 둘러싼 일상생활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기술 환경, 소비 환경, 산업 환경의 근본적 변화라는 도전에 직면
- 현재까지 콘텐츠산업 행정에 대한 성찰,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방안, 분야별 정책현안 등을 분석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 정책기조 및 정책추진 체계 재점검 필요

○ 연구 목적

- 콘텐츠산업 환경 변화 진단을 통한 정책수요 도출
- 콘텐츠산업 정책 진단을 통한 정책공급 분석
- 콘텐츠산업 정책 방향성 탐색을 통한 정책 수요와 공급의 간극 도출
-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정책 방향 제안

플랫폼 환경변화에 따른 영상콘텐츠 진흥정책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보고서 2021. 12. 10.

○ 연구 배경

- 영상콘텐츠 플랫폼 환경 변화와 대응 필요성
- 새로운 진흥정책을 통한 영상콘텐츠 생태계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

○ 연구 목적

- 영상콘텐츠 산업구조 및 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쟁점 및 과제파악
- 영상콘텐츠 관련 법제도 변화 및 정책동향 분석
- 현장 정책수요 파악 및 진흥정책 방향성 도출

나. 중선거구제도

개요

「공직선거법」 제26조 제2항은 “하나의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자치구·시·군 의원정수는 2인 이상 4인 이하로 하며”라고 규정하여 기초의회 의원의 지역구대표를 선출함에 있어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중선거구제란 하나의 선거구에서 2~5인의 대표자를 뽑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러나 중선거구제의 입법취지에도 불구하고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최종 선거구 확정 결과 전체 1,035개의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 중에서 2인을 선출하는 지역선거구는 591개(약 57%)이나, 4인을 선출하는 지역선거구는 27개(약 3%)에 불과하여 소수자의 목소리를 대변하

거나 청년 등의 정치 신인의 정치참여를 보장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022년 4월 15일 열린 본회의에서는 기초의회의원 중대선거구제 확대도입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전국 11개 선거구에 한정하여 1개의 선거구당 기초의회 의원을 3인~5인으로 확대 선출하도록 하는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운영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개정법률은 기초의회 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현행 4인 이상 선출 선거구의 분할 가능 규정도 삭제하여 사표방지, 군소정당의 의회진입 촉진 등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선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입법 동향

	소관 상임위원회	의안명과 주요 내용	의결일자 (본회의 결과)
1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p>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p> <p>[제안이유] 2022년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앞서 헌법재판소의 지방의회의원 선거구 인구편차 허용기준 변경(4:1 → 3:1)에 따른 헌법불합치 상황의 해소와 지방소멸 방지를 위하여 지역구 시·도의회의원정수와 그 선거구 및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총정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p> <p>또한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과정에서 발생한 코로나19 격리자 등의 투표권 행사의 미비점과 부실한 선거관리 실태를 개선하고, 격리자 등의 투표관리를 위한 준비시간을 위하여 사전투표 둘째 날에도 선거일 당일과 마찬가지로 격리자 등의 투표시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아울러, 선거사무장 등 및 투·개표참관인 등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이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현행의 2배로 일괄하여 인상하고,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선거사무장 등 수당 인상에 연동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을 함께 늘리며, 청년 정치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후보자등록을 하려는 사람이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 기탁금을 현행의 50%로,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 현행의 70%로 하려는 것임.</p> <p>[주요 내용]</p> <p>가.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구 시·도의회의원 총정수를 현행 690명에서 729명으로 39명 증원하고, 이에 맞추어 선거구구역표를 조정(45개 선거구 신설, 6개 선거구 통합)함(안 별표 2).</p> <p>나.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총정수를 현행 2,927명에서 2,978명으로 총 51명 증원하고, 이에 맞추어 총정수표를 조정함(안 별표 3).</p> <p>다. 4인 이상 선출 선거구를 분할할 수 있다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고,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확대도입의 효과검증을 위해 국회의원</p>	2022-04-15 (원안가결)

	소관 상임위원회	의안명과 주요 내용	의결일자 (본회의 결과)
1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p>선거구 기준 전국 11개 선거구 내 기초의원 선거구당 선출인원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한정하여 3인 이상 5인 이하로 확대함(안 제26조 제4항 및 부칙 제17조).</p> <p>라. 장애인인 후보자 또는 선거일 현재 39세 이하인 청년 후보자에 대하여 후보자 등록을 위한 기탁금을 인하하고, 기탁금 반환기준을 완화함(안 제56조 등).</p> <p>마. 선거사무장 등의 수당에 관한 현행 ‘공직선거관리규칙’의 규정을 현행법에 직접 규정하면서 수당을 현행의 2배로 일괄하여 인상하고, 투·개표참관인에 대한 수당도 2배로 인상하며, 선거사무장 등 수당인상액에 연동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을 함께 늘림(안 제121조 제3항, 제122조의2 제4항 및 제135조 제2항 등).</p> <p>바. 격리자 등에 한정하여 사전투표 둘째 날의 사전투표소를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하고, 격리자 등에 한정하여 선거일의 투표소는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운영함(안 제155조 제2항 및 제6항).</p> <p>사. 이 법 시행 이후 지역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 선거구의 조속한 확정과 선거구역이 변경된 지역 내 예비후보자의 원활한 선거운동 등을 위하여 부칙에 경과조치와 특례를 둠(안 부칙 제2조부터 제14조까지).</p>	2022-04-15 (원안가결)

정책 동향

[100대 국정과제] 7 국민주권적 개헌 및 국민참여 정치개혁(국조실)

과제목표

촛불민심 등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개헌, 정치선거제도 개혁 등 추진

주요 내용

(국민주권적 개헌 추진) 국회 개헌특위 논의 참여 및 지원

(국민의 참정권 확대) 국민투표 확대, 국민발안제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 검토, 18세로 선거연령 하향, 투표시간 연장 등 추진

(공직선거제도 개편) 국회의원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장애인·노령자 투표편의 제공 강화

- 공평한 선거, 돈 안 드는 선거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국민의 정치참여 확대) 정당 가입 연령제한 폐지, 공무원·교사의 정치참여 보장, 정당·선관위 민주시민교육 확대, 풀뿌리 민주주의 확대

- 정당의 정책기능 강화를 위한 국회의 정당 지원 강화

참고 자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021. 12.

이은주 의원안: 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 중선거구제 강화 등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022. 3.

김영배 의원안: 현행 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 중선거구제의 문제점 등

[헌재 2019. 2. 28. 2018헌마415 등, 판례집 31-1, 225 \[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 결정 2019. 2. 28.

[헌재 2021. 6. 24. 2018헌마405, 공보 제297호, 826 \[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 결정 2021. 6. 24.

[헌재 2018. 6. 28. 2014헌마166, 판례집 30-1하, 616 \[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 결정 2018. 6. 28.

[선거구획정의 접근방법에 대한 연구: 기초의회 선거구획정 과정을 중심으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2020. 4. 30.

선거구획정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만 그 해결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 중 기초의회 선거에서는 중선거구제를 도입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부터 시·도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설치해 조례로 획정을 하고 있으나, 매년 조례로 획정하지 못하는 시·도가 존재하는데 이번 제7회 지방선거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 글은 기초의회 선거구획정 과정과 문제점을 분석해 어느 영역에서 접근해 대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당장의 현실적 문제점 개선을 위해 효율성을 따진다면 상설·독립적인 선거구획정위원회를 통해 행정의 영역에서 신중한 검토를 할 수 있지만 선거구획정이 가져올 정치적 영향력이나 결과에 대한 관점에서 행정의 영역으로 단정 짓지 말고 입법의 영역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방선거 인구편차 허용기준 관련 정책적 고려사항](#)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2018. 8. 1.

이 보고서에서는 새로운 인구편차 기준을 제시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갖는 의미를 살펴보고, 새로운 기준이 지방선거에서 지역대표성과 평등선거의 가치를 조화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들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기초 지방의원 선거의 중선거구제 개편과 정치적 효과: 실패한 제도 개혁](#)

황아란, 「지방정부연구」, 제11권 제1호, 한국지방정부학회, 2007, 209-225쪽.

2006년 기초의원 선거의 중선거구제 개편은 핵심적인 선거규칙의 변화, 나아가 정치권력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기에 이에 대한 논란도 많았지만 그 효과에 대한 기대도 적지 않았다. 본 논문은 중선거구제 도입에 기대되었던 효과들이 실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피는데 초점을 두었다. 즉 중선거구제 개편의 의미와 도입목적에 비추어 2006년 기초의원 선거결과에 나타난 제도적 효과를 분석하는 것을 내용으로 삼았다. 분석 결과, 중선거구제의 도입은 소수파 진입과 지역주의 및 정당독점 완화, 사표발생 감소 및 대표성 제고 등의 기대효과를 실현시키지 못했고, 정당들도 기존의 구조화된 선거환경을 이용하여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행태를 보여 주었다. 이는 한국 정당체계의 양당제적 경향과 도시화 및 지역주의 영향이 선거환경을 지배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일반적인 제도 변화만으로 선거가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 점에서 중선거구제 개편은 대정당의 당리당략에 기초한 정치적 결정의 실패한 제도개혁 사례라 평할 수 있겠다.

[중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결합 시뮬레이션 분석](#) 국회입법조사처 「NARS 현안분석」 2018. 2. 6.

이 보고서는 최근의 선거제도 개혁논의가 처한 교착상황을 타개하고, 보다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지역구선거에서 현행 소선거구제를 선거구당 2~4인 선출의 중선거구제로 변경하고, 이를 병립형 또는 연동형 비례대표와 결합한 모델을 대안으로 검토한다. 시뮬레이션 결과, 부분적 중선거구제인 도농복합선거구제를 실시할 경우 전체 의원정수를 늘리지 않고도 지역구의석과 비례의석의 비율을 현행 5.4:1(253:47)에서 2.9:1(224:76)로 조정할 수 있으며, 지역패권구도의 완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전면적 중선거구제를 실시할 경우, 지역구의석과 비례의석의 비율은 1.7:1(189:111)까지 조정 가능하며, 지역구도 완화 효과도 모든 선거구에서 가시적으로 나타난다. 중선거구제와 비례대표의 병립형에서는 거대 정당보다 상대적으로 소수정당에 유리한 의석분포를 보이지만, 정당간 의석구도의 재편을 가져올 정도로 효과가 크지는 않다. 이는 중선거구제가 소수정당의 의석확보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맞지만, 중선거구제 실시로 비례의석의 비중이 높아진다고 해서 소수정당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중선거구제와 비례대표의 연동형 모델이 갖는 유의미한 특징은 현재 연동형 비례제 도입논의가 직면한 교착상태를 타개하면서 연동형 비례제 본래의 제도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점에 있다.

다. 군 장병 인권 보호

개요

군 복무자는 군인이기에 앞서 인권을 누리고 보호받아야 할 권리 주체입니다. 군 인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장병 눈높이에 맞는 인권 친화적인 병영문화 조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장병 인권보장은 군대조직에 대한 헌신 의지와 복무 의욕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지휘권의 강화에 기여하며, 장병 개개인의 존엄성을 기반으로 한 인간 중심의 선진 병영문화의 기반입니다. 국방부는 조직·법령·제도 등 군 인권보호 기반체계를 구축하고, 직무별·복무단계별 장병 인권교육 실시, 장병 인권상담과 인권침해 진정에 대하여 조사하고 구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4월 15일 본회의에서는 군 장병 인권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로서 특별검사 임명 등을 명한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률은 군 내 성폭력과 성폭력 은폐에 대한 범죄는 비군사적 사항으로서 군 지휘체계의 영향을 받지 않는 민간검찰에 의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른 입법입니다.

입법 동향

	소관 상임위원회	의안명과 주요 내용	의결일자 (본회의 결과)
1	행정위원회	<p>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p> <p>공군 20전투비행단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과 관련한 이예람 중사의 사망으로 군대 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발생함. 사망 사건 이전에 피해자가 2번의 성추행·성폭행 사건(2019, 2020년)을 상부에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군대 내에서는 가해자를 감싸고, 해당 사건을 덮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 바 있으며,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고, 피해자에 대한 회유와 협박 등의 반사회적인 범죄가 발생하였으며, SNS 등을 통한 피해자의 신원노출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추가로 밝혀지고 있는 상황임. 또한,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군사경찰, 군검찰, 양성평등센터, 국선변호인 모두가 사건 관계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가해자가 전역하기만을 기다리며 늦장수사를 벌였다는 점이 확인되었고, 공군 군사경찰은 해당 사망 사건을 국방부에 허위로 보고했다는 것도 밝혀짐. 군 내 성폭력과 성폭력 은폐에 대한 범죄는 군사적 사항이 아닌 비군사적 사항이고, 군내 조직인 군검찰단이 해당 사건을 독립적으로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도 높은 상황으로 군의 지휘체계에서 영향을 받지 않는 민간 검찰에 의해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음. 현행 「군사법원법」과 「군형법」에서 군대 내의 모든 범죄행위는 군검찰단과 군사법원에서 수사하고 판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민간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특별검사 임명을 통한 수사와 진상규명이 불가피한 상황임. 이에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연관된 군 내 성폭력, 2차 피해 유발 행위, 해당 사건과 관련한 국방부 및 공군 본부 내의 은폐, 무마, 회유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에 대한 진상규명을 명확히 하고자 함.</p>	2022-04-15 (원안가결)

정책 동향

[100대 국정과제] 89 장병 인권 보장 및 복무 여건의 획기적 개선(국방부)

과제목표

직업군인 및 의무복무자에 대한 복무 여건 개선 및 인권 보장 강화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병역 면탈 예방 및 근절을 위한 병역관리시스템 구축

주요 내용

(병 봉급 인상) '22년까지 최저임금의 50%까지 단계적 인상 추진

[100대 국정과제] 89 장병 인권 보장 및 복무 여건의 획기적 개선(국방부)

- (공무상 부상치료비 전액 지원) 공무상 부상을 입은 장병이 최선의 치료를 선택할 권리 보장
- 공무상 부상자에 대한 민간병원 치료비 전액 지원을 단계적으로 추진
- (자기개발 지원 및 급식 질 향상) 군 복무 학점 인정 추진 및 장병 자기 개발 지원을 강화하고, 군 급식 시스템 개선을 통한 급식 질 개선 추진
- (인권 보호 강화) 국가인권위원회 내 ‘군인권보호관’ 신설 및 군 의문사 진상 규명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여군 근무 여건 보장) 여군 인력 및 계급별 진출을 확대하고, 여군의 임신·출산·육아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군 성폭력 범죄자 처벌 강화 및 무관용 원칙 엄중 적용
- (병역 면탈 예방) 국세청 등 유관기관 협조를 통해 고위공직자 등 사회적 관심계층의 병적 집중관리 및 상시 모니터링·검증체계 강화
- (직업군인 주거 지원) 맞춤형 주거 지원 및 민간주택을 활용한 공급방식 다변화 등 직업군인 주거 지원 제도 발전

2019~2023 국방인권정책 종합계획

‘인권 친화적인 병영문화 정착’이라는 목표 하에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의 입법취지를 반영해 중·장기적 국방인권정책의 청사진 제시

— 군 인권보호 기반체계 구축

조직기반 구축	자문기능 강화	점검 시스템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 인권보호관 설치 ○ 국방 인권 전담조직 설치 ○ 군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전담기구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 인권정책회의운영 ○ 군 인권보호 자문위원회 운영 ○ 군 인권자문변호사 제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방 인권영향평가제도 활성화 ○ 국방 인권모니터단 운영 활성화 ○ 군 인권지킴이 시스템 개선

— 군 인권의식 향상

간부 인권감수성 제고	군 인권교육기반 강화	병 인권교육 효과적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부 인권교육 강화 ○ 인권관련 업무 종사자 인권교육 ○ 장병 사적지시 근절 등 불합리한 관행과 부조리 척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성인지·자살예방 교관 등 운영 ○ 다양한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 UCC, 영화, 웹툰 등 ○ 국방인권교육협의회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 인권교육 내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대 실정을 고려한 인권교육 기준 정립(교육주기, 시간 등) » 병 복무주기에 기초한 단계별 인권교육

— 군 인권실태조사 및 침해구제

인권실태 조사 및 평가	진정조사 및 상담	사법제도 개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 인권실태조사의 실효성 제고 ○ 군 성폭력 실태조사 추진 ○ 군 인권 평가지표 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침해 사건 진정조사 ○ 장병 권리구제전문 상담관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병의 재판받을 권리 강화 ○ 장병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 장병 기본권 침해유무 조사 지침 마련 ○ 인권 침해 신고자 보호조치

2019~2023 국방인권정책 종합계획

— 국내·외 인권정책 협력



— 군 인권보호 영역 확대



군 인권 보호 영역 확대

제도 개선

여성분리 접근 법제도 개선
일과이후 병 휴대폰 사용 허용
민간·공공병원 이용제도 개선
사역임무 대체 근무지원 확대
병 징계제도 개선

관련 : 2019~2023 국방인권정책 종합계획

참고 자료

[제395회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1호](#) 국회사무처 2022. 4. 14.

[제395회국회\(임시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국회사무처 2022. 4. 15.

[인권이 보장되는 병영](#) 국방부 국방정책 누리집

[군 장병 인권 보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위키」 2021. 12. 3.

[군 인권 제도 현황과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NARS입법정책」 2021. 12. 16.

2021년 성추행 피해를 입은 해군 및 공군 부사관의 자살과 육군 부사관의 자살 시도, 공군 병사 간 집단 폭행 및 성추행, 코로나19 자가격리 병사의 부실 식사, 육군 훈련소 화장실 이용시간 제한 등 군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했음. 2014년 윤일병 사망 사건 등 군 인권침해 사건 발생 시 법률 제도 및 신고·상담 제도 개선, 군 인권교육 활성화 등 군 인권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들이 개선 혹은 새로 시행된 바 있음. ……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군 성범죄, 폭행, 가혹행위, 모욕 등의 입건 수가 포함 수준을 유지하거나 증가해 인권침해가 지속되고 있음. 향후 군 인권의 보다 효과적인 보장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음.

[군 인권보호관 제도에 관한 사전적 입법평가](#) 한국법제연구원 일반연구보고서 2017. 11. 30.

- ▶ 「군인복무기본법」 제정에 따른 군 인권 문제 해결에 관한 입법적 조치 필요
- 군 내 인권 침해 구제 방안의 법제화
 - 군 인권 침해 구제를 위한 의견 건의, 고충 처리, 전문상담관 배치 등의 입법적 의무조치가 시행
 - ‘군 인권보호관’의 신설을 의무화하면서 다른 법률의 제정을 입법 의무로 부과하고 있음
- ▶ 후속 입법 조치의 미이행 상태의 지속
- 법률 시행 이후에도 ‘군 인권보호관’ 관련 입법은 제정되지 않음
 - 기본법 시행 이전에 입법이 이루어져 군 인권 구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부여한 입법 의무를 국회 스스로 이행하고 있지 않음
- 입법부작위 해소를 위한 노력 필요
 - 현재 국회 소속 ‘군 인권보호관’ 제도 신설 방안과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군 인권보호관’ 제도의 신설에 관한 입법안이 제출되어 있음
 - 국방부 소속 ‘군 인권보호관’ 제도를 신설하는 방안도 입법안으로 제출되어 있음
 - 각 입법안을 검토하여 관련 제도의 입법적 의무 이행이 필요
- ▶ ‘군 인권보호관’ 제도 신설 방안에 관한 검토 필요
- 현행 국회 입법안의 비교 검토를 통한 적정 입법대안의 제시
 - 입법평가방법론을 활용한 입법대안 제시
 - 비교대안적 방안을 검토하여 입법대안의 적정성 검토
 - 비교법적 방법을 검토하여 입법대안 검토

군 인권보호제도 발전방안 연구 한국국방연구원 2017.

본 연구에서는 군 인권보호제도의 발전 방향으로서, 침해 구제 처리과정에서의 신고자 신원비밀 보장과 사후 불이익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권리침해 구제·예방 제도 간 연계 강화를 위한 효율화 추진, 침해 구제·예방 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 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인사·평정 제도의 개선, 신설될 군인권보호관 협업체계의 구축 등과 함께, 군 인권 관련 제반 업무를 집적하여 총괄 운영할 수 있는 국방부 인권 전담 부서의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군대 내 성폭력피해자 보호의 문제와 개선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2016. 10. 31.

언론에 보도된 일련의 군대 내 성폭력 사건들의 사회적 파장이 크고 군대 내 성폭력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자, 국방부는 군 성폭력 근절에 매우 적극적인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대 내 성폭력 예방 및 근절과 관련하여 많은 정책들이 최근 쏟아져 나왔지만, 이것이 일선 부대에서 효과적으로 실행되도록 하는 것은 향후 장기적 과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군대 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의 문제에 초점을 두고 우리나라 성폭력예방 및 방지 관련 정책과 선진국 사례를 검토하고, 전역병사, 전역장교 정책담당자, 성고충전문상담관, 성폭력예방 전문가 면담을 통해 군대 내 성폭력 피해신고와 피해자 보호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군내 성폭력 이슈와 개선 방향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아젠다포럼 2021. 7. 8.

- 사회: 안석기 (KIDA 국방인력연구센터장)
- 발제: 김영곤 (KIDA 국방인력연구센터 선임연구원)
장미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젠더폭력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

(사)지평법정책연구소 · 법무법인(유) 지평 공공정책팀



이공현 명예대표변호사
(법정책연구소 이사장)
02-6200-1770
leekh@jipyong.com



임성택 대표변호사
02-6200-1746
stlim@jipyong.com



윤영규 변호사
02-6200-1743
ykyun@jipyong.com



김진권 변호사
02-6200-1812
jkkim@jipyong.com



민창욱 변호사
02-6200-1841
cwmin@jipyong.com



이춘희 선임연구원
(지평법정책연구소)
02-6200-0628
chy@jipyong.com

지평법정책연구소 · 지평 공공정책팀 입법정책브리핑의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간단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설문조사 참여 링크](#)).